

# 海洋水産部の 統合 海洋行政 機能 遂行에 對한 國民認識

姜 閏 鎬\*

## A Study on the People's Perception of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on Function Execut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 Korea

Youn-Ho Kang

< 목 차 >

Abstract

I. 序 論

II. 統合 海洋行政 機能遂行에 對한 理論的 論議

III. 海洋水産部の 海洋行政 機能遂行 實態

IV. 海洋行政 機能遂行에 對한 國民 認識 分析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ir perception of integrated maritime administration functions execut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ased on the survey of people and users of maritime administration service.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I found that respondents had very affirmative view of the execution of integrated maritime administration functions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y of them had thought that most of maritime administration functions should be intensified which are execut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y of them preferre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other ministries or local governments as a executant of maritime administration functions. But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of maritime administration functions execut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as not so high but moderate.

\*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전임강사

## I. 서론

1994년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세계 각국간에 바다영토 확장과 해양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각국은 해양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나라는 해양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1996년 통합 해양행정 기구로서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여, 당시 13개 부처·청에서 분산적으로 수행되던 해양행정기능들을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통합 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해양수산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일부는 해양수산부의 존재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해양수산부의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창설이 해양수산 행정기능의 효율화에 공헌한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창설 이후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기능 수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관련 업체 및 이용자 단체들의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서, 향후 해양행정 기구 개편, 해양행정 기능 조정 등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 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기능 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과 해양수산 관련 업체 및 이용자 단체 구성원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 통합 해양행정 프로그램의 개발·집행·평가, 해양행정기구 개편, 해양행정기능 조정 등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 II. 통합 해양행정 기능수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통합 해양행정의 의의 및 필요성

그 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행정기능의 통합은 주로 연안통합관리(ICM,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강정운, 2001; 1996; 이지현, 1995; 1994.)<sup>1)</sup> 연안통합관리는 연안과 해양의 지역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관리에 대한 부분별 접근과 정부단위들간의 권한의 분리에 내재하는 단절(fragmentation)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다는 것이다(Cicin-Sain & Knecht, 1998). 연안통합관리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주제인 통합과 상호의존에 대한 반응으로서 탄생했으며 부분별 목표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1) Cicin-Sain & Knecht(1998)은 해양관리(ocean management)와 연안관리(coastal management)를 구분한다. 전자의 주요 이슈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크기, 타국과의 해양경계, 항해의 자유와 이주성 어류 같은 이슈에 대한 국제포럼에서의 국가의 입장 등을, 후자의 주요 이슈로는 해안침식에 대한 방책, 습지보전, 연안개발 부지 선정, 연안에 대한 공중의 접근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리를 연안관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안통합관리의 논리와 이론이 해양통합관리에도 적용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관리”는 “행정”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icin-Sain, 1993).

연안의 통합적 관리는 연안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연안개발을 위해 연안자원 및 사회·경제·문화적 자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Vallejo, 1993). 이를 위해 연안개발과 연안환경관리를 통합하고 수산업, 해운, 연안관광, 해안매립, 폐기물 처리 등의 각 분야별, 기능별 계획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연안의 여러 가지 용도를 최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Clark, 1996).

이와 같이 연안관리 기능의 통합은 연안관리에 있어서 개발수요와 환경보존의 조화와 통합, 연안육역과 연안해양 관리의 통합, 연안관리 관련 기관의 통합을 통한 기관간의 상이한 아이디어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포함한다. 연안관리 관련 기관 및 관리 주체의 통합은 통합 연안관리와 관련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들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연안정책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이 연안통합관리의 중심적 과제이다(강정운, 2001).

연안통합관리의 이해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관리의 목적,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점화장치, 연안통합관리의 기능, 관리의 수행주체, 연안통합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Cicin-Sain & Knecht, 1998).

연안통합관리의 목적은 연안과 해양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연안지역과 그 거주자들의 자연적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며, 연안과 해양지역에서 생태학적 과정, 생명지지체계 및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안통합관리의 주요 기능은 연안과 해양지역에서 지역의 기획(area planning), 경제개발의 촉진, 자원보호, 이용용도간의 갈등해결, 공공안정의 보호 등이다.

연안과 해양의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integrated coastal and ocean management)이 필요한 주요 이유는 (1) 고지(upland)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해양과 연안의 이용이 해양과 연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예, 연안역에서의 산업개발이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습지의 생산성을 감소시킴), (2) 해양과 연안 이용자들이 서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예, 석유개발과 수산업간의 갈등). 즉 연안 및 해양지역에서의 개발과 보전간의 대립을 포함하여 여러 해양 이용 활동간에 대립 혹은 협조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안 및 해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통합 해양행정 기능수행에 대한 인식조사의 중요성 및 조사내용

이와 같이 그 동안 연안 및 해양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해양수산부를 설립하여 해양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이론적으로 중요성이 논의되고 실제로 추진되어온 통합 해양행정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는 것은, 향후 통합 해양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통합관리(행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 집행 및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해양행정 프로그램의 개발, 집행 및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양행정 서비스의 고객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해양행정 기능수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통합해양행정 프로그램의 개발,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행정 기능 수행 기구의 개편, 정부간 혹은 부처간 해양행정 기능배분 등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관련 업체 및 이용자단체(이하에서는 해양수산 이용자 단체로 칭함)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기능수행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해양수산행정기구와 해양수산 단체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행정기구는 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중의 하나이며 어민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를 육성하고 이들 단체의 지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면서 조직이 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 행정기구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양자는 때에 따라서 우호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이종필, 1999).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는 해양행정 서비스의 주된 고객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생산·공급자의 감시·비판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해양행정기구의 고객이자 감시자로서 평소 해양행정기구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누구보다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기능 수행에 대한 이들의 평가나 견해는 향후 효율적인 해양행정 기능 수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해양행정 프로그램의 개발·집행·평가, 해양행정기구 및 기능 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조사하기로 한다.

첫째,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의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과 기관준립에 대한 정치적 지지 정도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한다.

- ①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것에 대한 견해
- ② 향후 해양행정기능을 현재처럼 해양수산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
- ③ 현재의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기능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견해

둘째, 해양행정기능 조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조사한다.

- ① 향후 강화 되어야할 해양수산 행정기능에 대한 견해
- ② 해양수산 행정기능별 중요성에 대한 견해
- ③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와 해양수산부간 쟁점 기능들에 대한 견해

### Ⅲ.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기능수행 실태

#### 1. 해양수산부의 주요 해양행정 기능

현재 해양수산부는 1차관보, 1실, 5국, 5관, 16소속기관(11개 지방청 포함), 1외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개발기능, 해양환경보전기능, 해양안전관리기능(해양안전 기획·대책수립, 해양조사·수로측량 및 항해안전자료 분석, 해양안전심판), 해운 및 항만관리기능(해운물류 정책수립·관리, 항만 건설·관리·운영), 수산정책·진흥기능(수산정책, 수산물유통·어촌개발, 어업진흥·어장개발, 어업지도선 운영), 수산연구 및 수산물 검사기능(수산진흥·연구, 수산물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간 해양행정 쟁점기능의 실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설되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들(지방자치단체 포함)간에 해양수산 행정기능 배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간 기능배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제기 되고 있다. 상이한 기능을 바다라고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행정기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타 부처의 정책대상과 관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귀결로 타 부처와 기능의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조선업무 등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수행 기능 중 해양수산부로 이관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양수산부의 타부처 대상 이관 요구 업무 실태의 개요

쟁점업무	개요
조선업무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의 조선업무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
해양자원개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자원개발과의 해양자원개발업무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해양관광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의 해양관광업무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관광과를 신설하여 이관하는 방안 검토
경정사업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의 경정사업 업무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해상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의 해상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관광과를 신설하여 이관하는 방안 검토
기상관련 기능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 업무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의 업무와 통합하여 해양대기청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수입수산물검사 일원화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수산물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도서개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 지역진흥과의 도서개발업무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근해어업허가권	지방자치단체의 근해 어업허가권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



6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4권 제2호

수산기능 등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관을 요구하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기능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sup>2)</sup>

<표 2> 타부처의 해양수산부 대상 이관 요구 업무 실태의 개요

쟁점업무	개요
항만건설업무 이관	해양수산부 항만국의 항만건설관련업무를 <b>건설교통부</b> 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항만관리권 이관	해양수산부의 항만관리권을 <b>지방자치단체</b> 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해양환경보전업무 통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와 해양보전과의 해양환경보전업무를 <b>환경부</b> 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습지보전관리기능 이관	해양수산부의 습지보전관리기능을 <b>환경부</b> 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해양수산업무 중 수산기능분리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b>농림부</b> 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수산물검사업무 일원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산물검사기능을 <b>보건복지부</b>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모두 이관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향후 통합 해양행정 프로그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들 기능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해양행정 기능수행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1. 조사설계

설문조사는 2002년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일반국민의 표본은 연안지역(마산, 진해, 여수, 인천 동해, 부산 등)과 내륙지역(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에 각각 250명씩 총 500명을 추출하여 직접 조사·회수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된 것을 제외하고 총 29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해양수산 이용자 단체 경우, 해운항만, 수산,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총 113개 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총 5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우편 조사가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응답된 것들을 제외하고 총 14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sup>3)</sup>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2) 해양수산부와 타부처간에 기능배분을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 되고 있는 쟁점 기능들에 대한 각 부처의 요구 논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영평 외(2002)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3) 해양수산 관련 단체 및 업체의 명칭은 「해양수산백서」(해양수산부, 2002)에 나와 있다.

<표 3>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단위: 명, ( )안은 %)

		국 민	이용자 단체
성 별	남	156(53.4)	128(88.9)
	여	136(46.6)	16(11.1)
	전체	292(100)	144(100)
연 령	20 대	126(43.3)	23(15.8)
	30 대	77(26.5)	42(28.7)
	40 대	71(24.4)	51(35.0)
	50 대	16(5.5)	22(15.0)
	60 대	1(0.3)	8(5.5)
	전 체	291(100)	146(100)
소속단체	해운항만	-	30(20.8)
	수 산	-	38(26.4)
	해양환경	-	28(19.4)
	해양안전	-	27(18.8)
	기 타	-	21(14.6)
	전 체	-	144(100)
거주지	연안지역	191(65.4)	109(75.7)
	내륙지역	92(31.5)	35(24.3)
	전 체	283(100)	144(100)

\*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missing value)는 제외

## 2. 분석결과 및 해석

1)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과 기관존립에 대한 인지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현재처럼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것이 잘한 일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약 54.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약 8.6%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국민들은 해양행정조직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표 4>). 이용자 단체 소속원의 경우 약 73.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약 13.8%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서 해양수산부로의 해양행정조직 통합을 대단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들이 해양수산부의 기관존립의 정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우리나라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현재처럼 해양수산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약 60.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약 11.7%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서 해양행정기능의 통합적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용자단체의 경우 약 77%가 긍정적으로 약 12.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해양행정기능의 통합적 수행을 대단히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들이 해양수산부에 의한 해양수산 행정기능 수행의 정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행정기능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약 55.2%,

이용자 단체 소속원의 약 44.4%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여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행정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표 4>와 <표 5>).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관련단체 및 업체가 현재의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서비스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향후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4>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 및 기관존립에 대한 인지도(국민; 단위: 명, ( )안은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전체
해양행정조직의 통합은 잘한 일이다	6(2.1)	19(6.5)	107(36.8)	116(39.9)	43(14.8)	291(100)
해양행정기능의 통합적 수행이 바람직하다	9(3.1)	25(8.6)	81(27.8)	126(43.3)	50(17.2)	291(100)
해양행정기능에 만족한다	24(8.3)	70(24.1)	160(55.2)	28(9.7)	8(2.8)	290(100)

<표 5>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 및 기관존립에 대한 인지도(이용자단체; 단위: 명, ()는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전체
해양행정조직의 통합은 잘한 일이다	8(5.5)	12(8.3)	19(13.1)	54(37.2)	52(35.9)	145(100)
해양행정기능의 통합적 수행이 바람직하다	8(5.6)	10(7.0)	15(10.5)	58(40.6)	52(36.4)	143(100)
해양행정기능에 만족한다	18(12.5)	25(17.4)	64(44.4)	33(22.9)	4(2.8)	144(100)

교차분석 결과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과 기관존립의 정당성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과 이용자단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과 기관존립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일반국민에 비해서 이용자단체 소속원이 더 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중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거주자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관련 업체나 단체의 소속원들 중 소속단체의 유형간(해운항만, 수산, 해양환경, 해양안전, 기타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alpha=0.05$ ).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기능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복수응답 가능), 일반국민의 경우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 부족(능장 대처)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해양수산 관련 정보제공 미흡을 두 번째로,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 부족 과 해양수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및 이익대변자 역할의 부족을 세 번째로 많이 지적 하였다. 이용자 단체 소속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 부족, 해양수산업에 대한 육



성·지원 및 이익대변자 역할의 부족,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부족의 순으로 높게 지적하였다 (<표 6>).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해양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이익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에게 해양수산 관련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6>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단위 : 명, ( )안은 %)

해양수산부의 기능 불만족 원인	국 민	이용자 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및 능력부족	120(41.0)	74(50.3)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 부족	175(59.9)	59(40.1)
해양수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및 이익대변자 역할 부족	120(41.0)	65(44.2)
공무원들의 불친절	16(5.5)	22(14.9)
해양수산 관련 정보제공 미흡	149(51.0)	36(24.4)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배제	80(27.4)	45(30.6)
기 타	15(5.1)	15(10.2)

2) 해양행정 기능 조정에 관한 인지도

(1) 해양수산부 기능의 강화 혹은 약화에 대한 인지도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혹은 약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국민은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전, 해운물류, 항만건설 및 관리, 수산정책, 어업진흥, 해양조사 및 안전관리, 수산연구 및 수산물 검사 등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 각각에 대하여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기능의 경우,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4.7%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해양수산부 수행기능에 대한 강화 혹은 약화에 대한 인지도(국민; 단위: 명, ( )안은 %)

기능	매우약화	약간약화	보통	약간강화	매우강화	전체
해양개발	15(5.1)	22(7.5)	42(14.4)	69(23.6)	144(49.3)	292(100)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7(2.4)	6(2.1)	12(4.1)	49(16.8)	218(74.7)	292(100)
해운물류	5(1.7)	9(3.1)	79(27.1)	92(31.5)	107(36.6)	292(100)
항만건설 및 관리운영	5(1.7)	10(3.4)	65(22.3)	96(33.0)	115(39.5)	291(100)
수산정책, 수산물유통 및 이촌개발	4(1.4)	9(3.1)	42(14.5)	94(32.4)	141(48.6)	290(100)
어업진흥, 어장개발 및 어업지도선 운영	5(1.7)	12(4.1)	65(22.4)	83(28.6)	125(43.1)	290(100)
해양조사 및 해양안전관리	5(1.7)	4(1.4)	43(14.8)	94(32.3)	145(49.8)	291(100)
수산연구 및 수산물검사	4(1.4)	9(3.1)	44(15.1)	73(25.0)	162(55.5)	292(100)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혹은 약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 해양수산 이용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해양수산 이용자단체 소속원의 경우도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표 8> 해양수산부 수행기능에 대한 강화 혹은 약화에 대한 인지도(이용자단체; 단위: 명, ( )은 %)

기능	매우약화	약간약화	보통	약간강화	매우강화	전체
해양개발	3(2.1)	6(4.1)	13(8.9)	49(33.6)	75(51.4)	146(100)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1(0.7)	2(1.4)	6(4.1)	23(15.6)	115(78.2)	147(100)
해운물류	2(1.4)	3(2.1)	24(16.4)	50(34.2)	67(45.9)	146(100)
항만건설 및 관리운영	2(1.4)	4(2.7)	36(24.7)	50(34.2)	54(37.0)	146(100)
수산정책, 수산물유통 및 어촌개발	4(2.7)	3(2.0)	22(15.0)	51(34.7)	67(45.6)	147(100)
어업진흥, 어장개발 및 어업지도선 운영	4(2.8)	8(5.5)	27(18.6)	44(30.3)	62(42.8)	145(100)
해양조사 및 해양안전관리	2(1.4)	0(0)	19(12.9)	56(38.1)	70(47.6)	147(100)
수산연구 및 수산물검사	4(2.7)	4(2.7)	22(15.0)	46(31.3)	71(48.3)	147(100)

<표 7>과 <표 8>의 기능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유의수준  $\alpha=0.05$ ),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 사이에 해양개발 기능의 강화에 대한 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집단 모두 해양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지만 후자가 전자보다 그 정도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능들에 대해 교차분석으로 국민의 거주지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민들 중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거주자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능들에 대해 이용자단체 유형간의 교차분석 결과, 수산 관련 기능 중 수산정책·수산물유통·어촌개발과 수산연구·수산물검사 기능에 대해 이용자단체들 간에는 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에 대해서는 해운항만, 수산, 해양환경, 해양안전, 기타 등에 소속된 대부분의 이용자 단체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는데, 특히 수산 관련 이용자단체가 다른 이용자단체들보다 더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 단체의 해양수산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며, 특히 인간의 생명 및 삶의 질과 관련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특히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해양수산 행정기능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

해양수산 행정기능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3개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표 9>에 나타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된 것(1순위로 선택된 것)들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되었고(47.3%), 이어서 해양영토의 관리, 해양자원개발의 순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3순위 이내에 선택된 것들 중에서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역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서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해양영토 관리의 순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해양수산 이용자단체의 경우, 1순위로 선택된 것들 중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이어서 해양영토의 관리,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순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3순위 이내에 선택된 것들 중에서는 역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이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되었고, 이어서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자원개발, 수산업 육성, 해양영토 관리의 순으로 많이 선택되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국민과 이용자집단간에 기능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alpha=0.05$ ; 1순위 선택 자료 기준).

일반 국민 중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거주자간에 해양수산행정기능의 중요도에 대한 견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해양수산 행정기능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 ( )안은 %)

해양수산 행정기능	국 민		이용자 단체	
	1 순위	3순위 이내	1 순위	3순위 이내
해양영토의 관리	58(19.9)	99(33.9)	29(19.7)	43(29.3)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138(47.3)	227(77.7)	54(36.7)	107(72.8)
해양안전 관리	5(1.7)	36(12.3)	5(3.4)	32(21.8)
해양자원의 개발	40(13.7)	144(49.3)	11(7.5)	47(31.97)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12(4.1)	109(37.3)	6(4.1)	31(21.08)
국제해양협력의 추진	6(2.1)	45(15.4)	6(4.1)	30(20.4)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12(4.1)	75(25.7)	19(12.9)	59(40.14)
수산업의 육성	5(1.7)	40(13.7)	15(10.2)	46(31.29)
어촌정주환경의 개선	6(2.1)	29(9.93)	0(0)	14(9.52)
해양관광 및 문화의 육성	6(2.1)	60(20.5)	0(0)	25(17.01)
기 타	0(0)	0(0)	0(0)	0(0)

해양수산 이용자 단체 중 단체의 유형간에는 해양수산행정기능의 중요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양환경, 해양안전, 기타 관련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양환

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해운항만 관련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양영토의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산 관련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산업 육성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행정기능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국민과 이용자단체 소속원 모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능을 가장 강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앞에서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3) 타 부처 기능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대한 인지도<sup>4)</sup>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해양수산부가 아닌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제외)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로의 기능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경정사업(문화관광부)과 기상관련업무(과학기술부/기상청)에 대해서만 현행 부서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약간 많았고, 나머지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는 기능 조정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타 부처들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해상 국립공원 지정·관리,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해양환경 부문), 도서개발, 육상기인 해양오염원 관리 등 4개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자단체 유형간에 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유의수준  $\alpha=0.05$ ).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해상국립공원 지정·관리 기능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대해서, 수산 및 해양환경 관련 단체가 이관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었고, 해양안전 및 기타 관련 단체는 약간 요구된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해운항만 관련단체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환경부의 기능인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기능 중 해양환경부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단체가 해양수산부로의 기능 이관을 원하고 있었지만, 특히 해양환경 관련 단체가 기능 이관에 적극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해양환경 부문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해양환경 보전 기능을 타 부처 보다 해양수산부가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자치부가 수행중인 도서개발 기능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해운항만 및 해양안전 관련 단체는 보통, 그리고 수산, 해양환경 및 기타 관련 단체는 약간 지지를 보내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환경부 수행 기능인 육상 기인 해양오염원 관리 기능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용자단체가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해양환경 관련 단체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

4) 본 절에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간의 기능 조정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조정대상 기능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일반국민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이용자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 III장에서 논의된 부처간 쟁점 기능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분석하되,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제외)에서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관을 요구하는 기능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타 부처의 해양수산부 대상 기능 이관 요구는 해양수산부의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처간 기능 조정에 관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결과는 육상 기인 해양오염원 관리를 해양수산부가 환경부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겠다. 현재 해양환경 오염의 약 80% 이상이 육상기인 오염물질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육상 환경보전에 정책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육상 기인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해양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로부터 오는 결과인 듯하다.

<표 10> 타 부처 기능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 ( )안은 %)

기능 (현재 수행부처)	전혀 요구안됨	거의 요구안됨	보통	약간 요구됨	크게 요구됨	전체
조선업무 (산업자원부)	3 (2.2)	24 (17.6)	36 (26.5)	28 (20.6)	45 (33.1)	136(100)
대륙붕의 해양자원개발 (산업자원부)	1 (0.7)	11 (7.9)	26 (18.6)	54 (38.6)	48 (34.3)	140(100)
해양관광 (문화관광부)	2 (1.4)	18 (13.0)	31 (22.5)	45 (32.6)	42 (30.4)	138(100)
해양국립공원지정·관리 (환경부)	3 (2.2)	16 (11.9)	36 (26.9)	41 (30.6)	38 (28.4)	134(100)
경정사업 (문화관광부)	9 (6.9)	33 (25.2)	49 (37.4)	24 (18.3)	16 (12.2)	131(100)
기상관련업무 (과학기술부/기상청)	13 (9.7)	46 (34.3)	50 (37.3)	16 (11.9)	9 (6.7)	134(100)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 사업 해양환경부문(환경부)	5 (3.7)	15 (11.2)	30 (22.4)	42 (31.3)	42 (31.3)	134(100)
수입수산물검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3 (2.2)	20 (14.4)	38 (27.3)	36 (25.9)	42 (30.2)	139(100)
항만연결운하건설 (건설교통부)	6 (4.4)	19 (14.1)	39 (28.9)	42 (31.1)	29 (21.5)	135(100)
도서개발 (행정자치부)	4 (3.0)	19 (14.2)	60 (44.8)	26 (19.4)	25 (18.7)	134(100)
도서의 소규모항 개발 (행정자치부)	4 (2.9)	13 (9.5)	46 (33.6)	49 (35.8)	25 (18.2)	137(100)
해사골재자원조사 및 채취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2 (1.5)	16 (11.9)	42 (31.1)	44 (32.6)	31 (23.0)	135(100)
해양자원·에너지의 실용화 (산업자원부)	2 (1.4)	20 (14.5)	36 (26.1)	40 (29.0)	40 (29.0)	138(100)
육상기인해양오염원 관리 (환경부)	2 (1.5)	18 (13.2)	32 (23.5)	39 (28.7)	45 (33.1)	136(100)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양수산부로의 기능 이관에 대한 인지도

해양수산 이용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의 기능 이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11>에



나타나 있다.

해양환경보전, 근해어업허가, 수산자원관리, 어업인후계자 선정·관리, 연해어업지도단속업무 등 <표 11>에 있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양수산부로의 기능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 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와 같은 기능 수행 주체로서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해양수산부를 더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표 11>에 있는 기능들 중 해양환경보전과 어업인 후계자 선정·관리의 2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이용자단체 유형간에 인지도의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유의수준  $\alpha=0.05$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해양환경보전 기능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용자단체가 큰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해양환경 및 기타 관련 단체는 대단히 큰 지지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이용자단체는 해양환경 기능 수행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해양수산부를 훨씬 더 크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어업인 후계자 선정·관리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에 대해서, 해양안전 관련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단체들은 모두 약간 크게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해양안전 관련 단체의 경우는 반대로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을 지지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더 많게 나타났다.

<표 1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양수산부로의 기능 이관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 ( )안은 %)

기능	전혀 요구안됨	거의 요구안됨	보통	약간 요구됨	크게 요구됨	전체
해양환경보전	4 (2.8)	9 (6.2)	16 (11.0)	54 (37.2)	62 (42.8)	145(100)
근해어업허가	8 (5.6)	21 (14.7)	35 (24.5)	44 (30.8)	35 (24.5)	143(100)
수산자원관리 (인공어초, 종묘방류사업등)	2 (1.4)	9 (6.3)	27 (19.0)	55 (38.7)	49 (34.5)	142(100)
어업인후계자 선정·관리	8 (5.6)	27 (19.0)	41 (28.9)	47 (33.1)	19 (13.4)	142(100)
연해어업 지도단속업무	6 (4.2)	12 (8.4)	36 (25.2)	53 (37.1)	36 (25.2)	143(100)

(5)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에 대한 인지도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행정기능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항만관리·운영, 선원노정, 어항건설 등 <표 12>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 수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해양수산 이용자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해양수산부에 의한 해양수산 행정기능 수행을 더 크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는 주는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표 12>에 있는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이용자단체 유형간에 인지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alpha=0.05$ ).

<표 12> 해양수산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 ( )은 %)

기능	전혀 요구안됨	거의 요구안됨	보통	약간 요구됨	크게 요구됨	전체
항만관리·운영	24(17.3)	38(27.3)	33(24.5)	26(18.7)	17(12.2)	139(100)
선원노정	29(20.7)	34(24.3)	48(34.3)	17(12.1)	12(8.6)	140(100)
어항건설	25(17.9)	36(25.7)	39(27.9)	27(19.3)	13(9.3)	140(100)
연안 및 공유수면관리	29(20.9)	36(25.9)	30(21.6)	30(21.6)	14(10.1)	139(100)
항로표지	36(25.2)	46(32.2)	23(16.1)	20(14.0)	18(12.6)	143(100)
어업지도·단속	29(20.4)	37(26.1)	27(19.0)	31(21.8)	18(12.7)	142(100)
수산물 품질검사	26(18.4)	37(26.2)	38(27.0)	21(14.9)	19(13.5)	141(100)

3) 기타

해양수산물부의 해양수산물 행정기능 및 역할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몇 가지로 유형화 시켜 정리한 것이 <표 13>에 나타나 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및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 증대, 해양행정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속적인 해양기술 개발, 어업협정 등 대외관계 개선 등에 관해 언급한 사람들이 많았다.

해양수산물 이용자단체 소속원들 중에서는 해양행정 기능 및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기술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고,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물부 기능 강화 및 단일화에 관해 언급한 사람들도 비교적 많았다.

일반국민과 이용자단체의 구별 없이 해양행정 기능 및 역할의 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해양행정 기능이 규제보다는 지원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들이 해양행정 기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표 13> 해양수산물부의 해양수산물 행정기능 및 역할에 관한 기술 내용(단위: 명)

기술 내용	일반국민			해양수산물 이용자단체					
	연안	내륙	계	해운 항만	수산물	해양 환경	해양 안전	기타	계
어업협정, 국제협약 등 대외관계 개선	3	15	18		1				1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및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 증대	13	20	33		1	1			2
해양행정 기능 및 역할 강화	10	15	25	4	8	3	7	3	25
해양수산물부에 대한 홍보 강화	2	12	14	1	1				2
지속적인 해양기술 개발	10	10	20	1	1				2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	2	1	3	2	5	1	1	1	10
해양수산물부 기능 강화 및 단일화	3	4	7	2	5	1	1	1	10

## V. 결 론

본 연구는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업체의 해양수산부의 역할수행과 기관존립, 그리고 해양행정 기능 조정에 대한 견해를 조사해봄으로써, 해양행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 소속원들은(특히 후자는)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것과 향후 해양수산 행정기능을 해양수산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행정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 모두 대단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두 집단 모두 해양수산 행정기능들 중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이 가장 중요하며, 해양영토의 관리, 해양자원개발,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비교적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처간에 기능 조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쟁점 기능들에 대해서,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는 현재 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행정 기능들(조선업무, 대륙붕의 자원개발, 해양관광, 도서개발, 도서의 소규모항 개발 등)의 상당수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야 하며, 경쟁사업과 기상관련업무는 현행 부처에서 계속 수행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 행정기능들(해양환경보전, 근해어업허가, 수산자원관리 등)의 상당수도 해양수산부로 기능이 이관되어야 하며, 현재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 행정기능들(항만관리·운영, 선원노정, 어항건설, 연안 및 공유수면관리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기능 이관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반국민과 해양수산 이용자단체는 해양수산부의 존재와 해양행정기능의 해양수산부에 의한 통합적 수행을 크게 지지하고, 부처간(지방정부 포함)에 해양행정 기능 이관을 둘러싸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해양수산부에 긍정적인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해양행정 기능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부족,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능력 부족 등을 많이 들고 있었으므로, 향후 해양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수요에 좀 더 관심을 지니고 문제에 신속히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행정 서비스의 고객인 일반국민과 이용자단체는 해양행정 기능 중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양행정 프로그램 개발 시 해양환경과 생태계보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높여서 그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국민과 이용자단체가 해양행정 수행 주체로 타 부처(지방정부 포함) 보다 통합 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에 더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해양행정 기능조정과 담당 기구 개편 시 연안 및 해양 통합관리의 정신을 보다 더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며, 연안 및 해양 통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아가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정운. (1996). 지역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국토계획」, 31-3(83).
- 강정운. (2001). 한국 연안통합관리의 효율화 방안.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12(3).
- 김영평 외. (2002).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해양수산기능 조정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삼일회계법인.
- 박성래. (1996). 해양수산부 창설기념 정책토론회. 「현대해양」. 319.
- 엄기철. (1993). 「해안역관리제도연구」.
- 오재열. (1997).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조직간 상호보완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필. (1999). 「한국 농림·해양수산 행정기구의 변화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 (1994). 연안통합관리의 개념, 과정 및 실행방안: 제도적 접근법과 과학기술적 접근법에 관한 비교 고찰. 「해양정책연구」. 9(1).
- 이지현. (1995).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전략적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 연구」. 10(1).
- 이지현. (1996). 해양수산부 신설: 연안생태계 보전정책을 위한 제언. 「자연보존」. 95.
- 전승규. (1996). 해양수산부 출범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 「감사」. 50.
- 조동오. (2001). 「연안통합관리론」. 해양환경안전학회.
- 최원일. (1997). 「신생 조직의 상징 활용: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 해양수산부. (2002). 「해양수산백서」.
- 해양수산부. (2000). 「연안통합관리계획」.
- Cicin-Sain, Biliana. (1993).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21-1/3.
- Cicin-Sain, Biliana & Robert Knecht. (1998).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s*. IOC, UNESCO.
- Vallejo, Stella Maris. (1993). Integration of coastal zone management in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21-1/3.
- Clark, John R. (1996). *Coastal Zone Management Handbook*. Lewis Publishers.

18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4권 제2호

Pogue, Pamela and Virginia Lee. (1999).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shore: The role of coastal management programs. *Coastal Management*. 27.

